

여야, 민생법 11건 처리…종합특검법 상정에 국회 또 필버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부동산 공급·토론판권 제도화 등 비쟁점 법 합의 3특검 수사 과정 새 범죄 혐의 포괄적 수사…**輿**, 오늘 강제 종료후 처리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을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며 국회에는 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란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체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를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명은 즉각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전하림 원내대표는 오후 3시 37분경 밤연대에 올라 "특검이라는 칼은 살아있는 권력의 죽은 부위를 도려내는데 써야 한다"며 "죽은 권력을 부관찰시키는 재당, 삼당의 종합특검이 아니라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합특검의 본질은 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태경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옹호 세력은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특검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로선 출석한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내란특검이 곧 민생 특검이다 국가 정상화 과정"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여야의 대치 속에서도 합의된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선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된다.

이는 국토부가 사고 당시자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위원회 보고서의 국회 제출도 의무화했다.

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피해 당시 운영됐던 중앙합동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매년 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의결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분야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토론판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돼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조각 투자가 법적 태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도 군인 단기부모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군인사법 개정안,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 기한을 연장한 미세먼지법 개정안,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노동 환경과 불법적 기업 행위를, 국민의힘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조사 목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장동혁 "공천 현금·통일교 특검을" 단식 돌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 제헌국회의원상 앞에서 공천현금·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 국힘 내홍 '폭풍 전야'

장동혁 "23일까지 소명 기회"

한측 "재심 안 해" 법적 대응 검토
의총선 정치적 해법 주문 중재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당원계시판 여론 조작' 의혹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잠정 보류 했다.

당한·당규상 보장된 열흘간의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지만, 당내에서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 청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제명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리위 결정 직후 조·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제

명은 과하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징계 확정 여부는 이르면 26일 최고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비주류 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증거는 반영하고 처벌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당을 파국으로 몰고 가면 리더십 자체가 훈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 측은 격약된 반응을 보였다. 한 전 대표와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여론이 뒤집히자 소명하라는 것은 교활한 솔수"라며 "재심 청구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 전 대표 측은 징계 효력 정지 거쳐분 신정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전 대표의 사과와 장 대표의 제명 철회를 통한 '정치적 해법'을 주문하는 중재론이 비등했다.

만약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해져 올해 6월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당 창당설에 대해 친한계는 "능성은 전무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 본회 의에 앞서 '무기한 단식'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현금 의혹 등 이른바 '상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목적이지만, 단식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끼어든 데는 당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양수 경쟁의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하자 당의 내홍이 견접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서 지도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을 잠재우고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김남준 "檢개혁 대통령 의지 의심 안해도 돼"

靑 대변인 "중수청·공소청법 최대한 의견 반영…이혜훈, 국민이 판단"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부의 중대범죄 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관련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권 일각의 반발에 대해 "최대한 속의를 거쳐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그동안 (검찰에 의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당했던 분인 만큼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

다"고 역설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당의 속의와 정부의 수렴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겸정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선 비판에 대해서도 "통합 국정 운영 기조는 변함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에는 "대통령의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선 "서울외교의 완전한 복원과 함께 CPTPP 가입 문제에서도 일본의 전향적 입장을 확인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배웅 등 우호적 분위기도 전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효과에 대해서는 "기품이 달라지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호평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간이 의식을 자배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그러나 오히려 청와대에 있었어야 했다"고 조언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총리 "정교유착, 국익 차원서도 정리해야"

춘천서 'K-국정설명회'

해외에서도 (한국 이미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총리는 국내 경제의 큰 축 가운데 몇 가지를 바꾸려 한다며 그중 하나가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에서 멀수록, 소멸 위기가 있는 곳일수록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가급적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을 실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는 고유의 특별성 있다. 강원도가 가진 비전이 바이오헬스, 반도체, 미래모빌리티에 있는 것을 안다"며 "정부와 대통령이 손잡고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교유착이) 국내에서 문제이지만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콤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콤!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한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상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 385-4977~8

동림아나로지점 062) 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 364-8400
유덕아나로마트 062) 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 511-2901~3